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2/4분기 평화지수 전망

최성근 · 이해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남북관계가 연초부터 표류하면서 여전히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69명에 대해 실시했다. 먼저 2015년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 은체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 5.30 조치와 경제개발구 지정 등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가 북한경제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특히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하며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과제는 '5.24 조치 해제'를 꼽았으며,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반전했다. 1/4분기 평화지수는 급락하여 33.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1분기 만에 '긴장 고조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2/4분기 기대 지수 역시, 전기 대비 11.6p 하락한 40.2를 기록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첫째,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둘째,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대북지원 및 남북 인적교류 감소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셋째,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악화되었고,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크게 악화되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 사업, 남북 청소년 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북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 10명 중 8명(85.5%)은 안정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4년차의 북한에 대해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 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은체제 북한 평가 〉

| 구분 | 다소 안정되었다 | 매우 안정되었다 | 다소 불안정하다 | 매우 불안정하다 |
|-------|----------|----------|----------|----------|
| 응답 비중 | 71.0% | 14.5% | 10.1% | 4.3% |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 10명 중 7명(75.3%)은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북한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은 지난해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를 발표하고,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의 개혁·개방 조치를 단행,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제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경제정책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

| 구분 |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
| 응답 비중 | 71.0% | 24.6% | 4.3% |

남북관계 개선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71.0%)들이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문가 10명중 3~4명(36.2%)은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 일부는 ‘독수리 훈련 종료(4.24) 이후(18.8%)’와 ‘6.15 15주년을 계기(15.9%)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는 힘들 것(29.0%)’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남북관계 개선 시기 〉

| 구분 | 8.15 광복 70주년 계기 | 올해 안에는 힘들 것 | 독수리훈련 종료(4.24) 이후 | 6.15 15주년 계기 |
|-------|--------------------|----------------|----------------------|--------------|
| 응답 비중 | 36.2% | 29.0% | 18.8% | 15.9% |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98.5%)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86.6% | 11.9% | 1.5% | 0.0% |

특히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10명 중 9명(92.7%)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과반수의 전문가들(50.7%)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도 42.0%로 나타났다. 다만, 소수(7.2%)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50.7% | 42.0% | 5.8% | 1.4% |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61.2%)는 올 하반기에는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중 일부는 내년 상반기(10.4%)에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당장(9.0%), 올 상반기(9.0%), 내후년(9.0%)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과 내년 하반기(1.5%)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 〉

| 구분 | 올 하반기 | 내년 상반기 | 당장 | 올 상반기 | 내후년 | 내년 하반기 |
|-------|-------|--------|------|-------|------|--------|
| 응답 비중 | 61.2% | 10.4% | 9.0% | 9.0% | 9.0% | 1.5% |

남북경협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를 ‘5.24 조치 해제’라 응답하였다. 그 외에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4.5%)’, ‘개성공단 사업 발전적 확대 추진(10.1%)’, 고위급 회담 제의 등 ‘기타(7.3%)’, ‘남북중·남북러 등 다자협력 추진(5.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남북경협 우선 추진 과제 〉

| 구분 | 5.24 조치 해제 |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 | 개성공단 사업 발전적 확대 추진 | 기 타 (고위급 회담 제의 등) | 남북중·남북러 등 다자협력 추진 |
|-------|------------|-------------------|-------------------|-------------------|-------------------|
| 응답 비중 | 62.3% | 14.5% | 10.1% | 7.3% | 5.8%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 10명 중 9명(97.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과반수는 ‘매우 필요하다(58.0%)’고 응답하였으며, 상당수가 ‘다소 필요하다(39.1%)고 응답했다. 다만, ‘별로 필요 없다(1.4%)’와 ‘전혀 필요 없다(1.4%)’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 〉

| 구분 | 매우 필요하다 | 다소 필요하다 | 별로 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 |
|-------|---------|---------|---------|---------|
| 응답 비중 | 58.0% | 39.1% | 1.4% | 1.4%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 10명 중 8~9명(87.0%)은 개성공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성공단 중단(2013. 4) 이전 결과와 비교해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 개성공단 사업 추진 방향 〉

| 구분 | 점차 확대돼야 한다 |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점차 축소해야 한다 |
|----------------|------------|---------------|------------|
| 응답 비중 (13. 4) | 84.6% | 12.5% | 2.9% |
| 응답 비중 (15. 4) | 87.0% | 13.0% | 0.0% |

6자회담 재개에 대해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6자회담이 현 정부 임기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올 하반기

(27.5%)’, ‘내년 상반기(24.6%)’에는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 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37.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6자회담 재개 전망 〉

| 구분 | 올 하반기 | 내년 상반기 | 내년 하반기 | 올 상반기 | 현 정부 임기 내 불가능 |
|-------|-------|--------|--------|-------|---------------|
| 응답 비중 | 27.5% | 24.6% | 8.7% | 1.4% | 37.7% |

2015년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전문가들은 북러 및 북중관계는 긍정적, 북일 및 북미관계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먼저 북러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 10명 중 8명(81.1%)은 2015년 북러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북러관계를 ‘긍정적(68.1%)’ 또는 ‘매우 긍정적(13.0%)’으로 전망,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1.4%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북중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 10명 중 4명(40.6%)은 2015년 북중관계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북중관계를 ‘긍정적(40.6%)’ 또는 ‘보통(40.6%)’으로 전망하였으며, 18.8%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2015년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4명(44.8%)은 2015년 북일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15년 북일관계를 ‘부정적(41.8%)’ 또는 ‘매우 부정적(3.0%)’으로 전망했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43.3%)’으로 전망한 전문가도 10명 가운데 4명 수준이었으며, 반면에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11.9%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미관계에 대해 전문가들 10명 중 5~6명(56.7%)은 2015년 북미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들은 2015년 북미관계를 ‘부정적(50.7%)’ 또는 ‘매우 부정적(6.0%)’으로 전망하였으며, 반면에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

| 구분 |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보통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 응답 비중 | 북러 | 13.0% | 68.1% | 17.4% | 1.4% | 0.0% |
| | 북중 | 0.0% | 40.6% | 40.6% | 18.8% | 0.0% |
| | 북일 | 0.0% | 11.9% | 43.3% | 41.8% | 3.0% |
| | 북미 | 0.0% | 6.0% | 37.3% | 50.7% | 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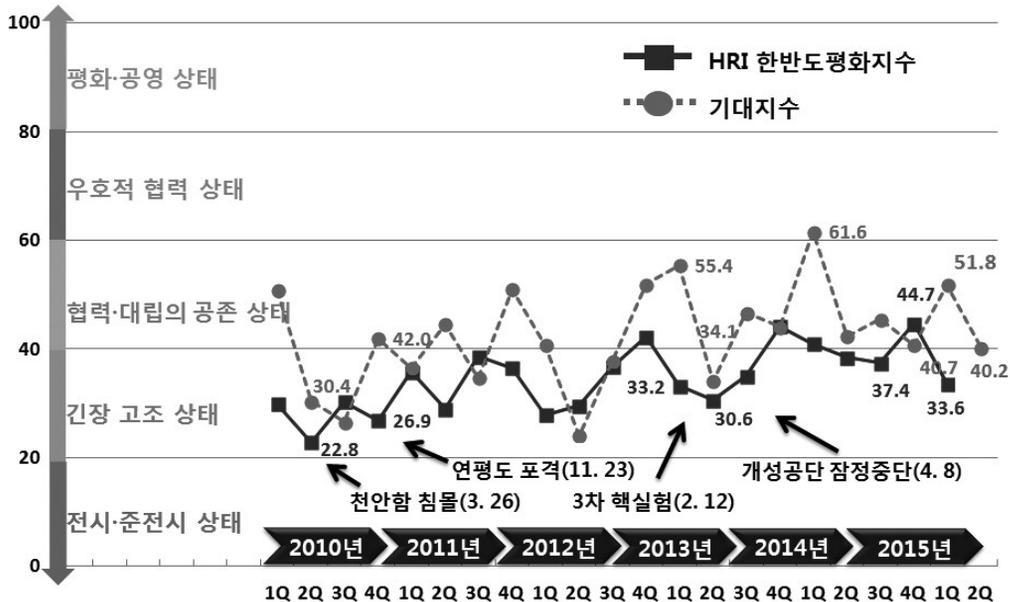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과 과제

종합 평가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33.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긴장 고조 상태’로 다시 악화되었다. 지난 분기(2014년 4/4분기) 평화지수는 1년 만에 반등하여 40p대로 진입했으나, 1분기 만에 전기 대비 11.1p 하락했다. 이는 연초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간 상호 비방이 이어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1.6p 하락한 40.2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2015년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및 정부간 대화의 모멘텀을 상실한 데 따른 전문가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특징 및 항목별 분석

먼저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의 특징은 주관적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점이다. 2015년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6.7, 정량분석지수는 40.5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에는 39.0으로 7.7p 상승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12.3p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전기 대비 12.3p 하락한 수치이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특히 전문가평가지수는 8분기 만에 다시 20p대로 하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지수 하락의 배경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 등 관계 개선이 크게 기대되었으나, 연초 한미 연합 훈련 및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상실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11.1p 크게 하락하며 반전했다. 이는 남북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된 가운데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상실되면서 2/4분기에도 남북 양측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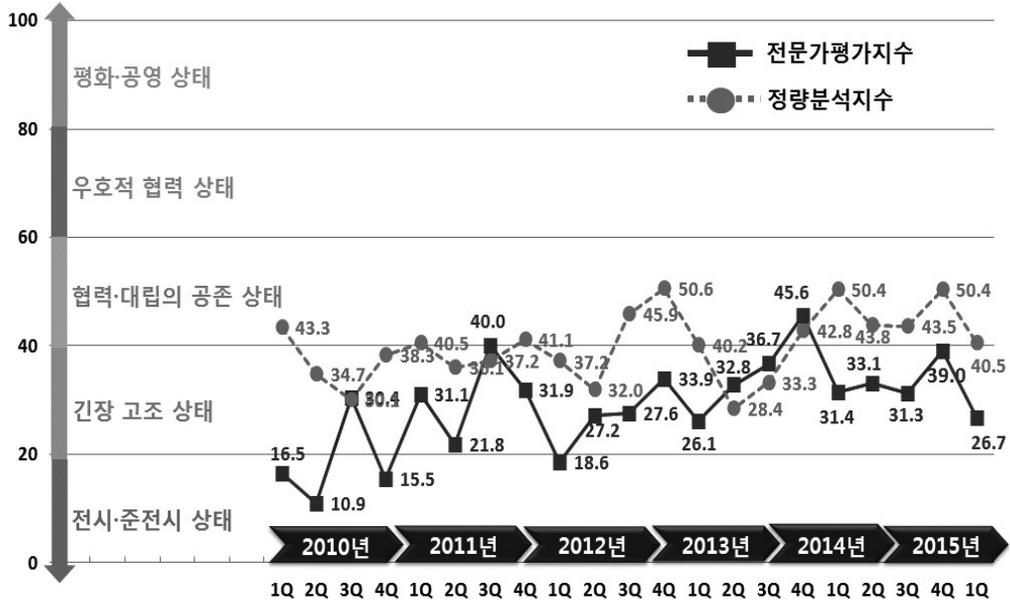
〈 2013~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부문별 추이 〉

| 구 분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 | | | 기대지수 |
|----------|----------------|-----------------|-----------------|-----------------|-----------------|-----------------|
| | 전문가 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 이벤트지수 | | 교류지수 | |
| '15. 1분기 | | | 33.6 (▽11.1) | 26.7 (▽12.3) | | 40.5 (▽9.8) |
| '14. 4분기 | 44.7 (▲7.3) | 39.0 (▲7.7) | 50.4 (▲6.8) | 46.9 (▲0.3) | 53.8 (▲13.1) | 51.8 (▲11.1) |
| '14. 3분기 | 37.4 (▽1.0) | 31.3 (▽1.8) | 43.5 (▽0.3) | 46.3 (▽0.5) | 40.8 (0.0) | 40.7 (▽4.8) |
| '14. 2분기 | 38.4 (▽2.4) | 33.1 (▲1.7) | 43.8 (▽6.6) | 46.8 (▽5.5) | 40.8 (▽7.7) | 45.5 (▲3.2) |
| '14. 1분기 | 40.9 (▽3.3) | 31.4 (▽14.2) | 50.4 (▲7.6) | 52.3 (▲5.2) | 48.5 (▲10.0) | 42.3 (▽19.3) |
| '13. 4분기 | 44.2 (▲9.2) | 45.6 (▲8.9) | 42.8 (▲9.5) | 47.1 (▲0.6) | 38.5 (▲18.5) | 61.6 (▲17.5) |
| '13. 3분기 | 35.0 (▲4.4) | 36.7 (▲3.9) | 33.3 (▲4.8) | 46.5 (▲16.6) | 20.0 (▽6.9) | 44.1 (▽2.6) |
| '13. 2분기 | 30.6 (▽2.6) | 32.8 (▲6.7) | 28.4 (▽11.8) | 29.9 (▽3.6) | 26.9 (▽20.0) | 46.7 (▲12.6) |
| '13. 1분기 | 33.2 (▽9.1) | 26.1 (▽7.8) | 40.2 (▽10.4) | 33.5 (▽14.6) | 46.9 (▽6.2) | 34.1 (▽21.3) |

주 : 금번 평화지수의 보정작업으로 인해 이전 보고서상의 지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의 두 번째 특징은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 역시 주관적 지표와 같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지난 분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50.4에서 9.8p 하락한 40.5를 기록하여 비록 지표상으로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이나 거의 ‘긴장 고조상태’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잇따른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행과 UN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을 둘러싼 남북 양측의 공방,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2010~2015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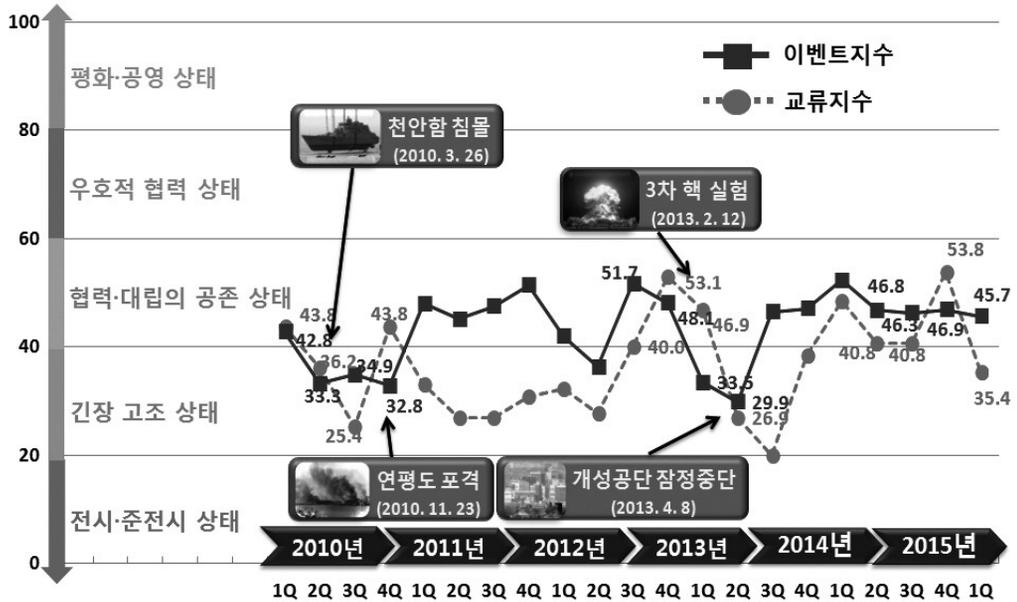
주 : 금번 평화지수의 보정작업으로 인해 이전 보고서상의 지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벤트지수(2014년 4/4분기 : 46.9 → 2015년 1/4분기 : 45.7)는 연초 남북대화 재개 기대감이 높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한미 군사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분기보다 다소 하락했다. 특히 2015년 들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남북 대화 및 이산가족 상봉 행

사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 바 있다. 그러나 이후 UN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보수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흡수통일 발언 등으로 잇따른 비난 공방이 이어졌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 교류지수(2014년 4/4분기 : 53.8 → 2015년 1/4분기 : 35.4)는 전기 대비 무려 18.5p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일련의 남북간 대립과 갈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지원 재개와 남북간 인적교류 등 전분기의 개선 흐름이 재차 끊어짐에 따라 교류지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2010~2015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추이 〉



주 : 금번 평화지수의 보정작업으로 인해 이전 보고서상의 지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의 마지막 특징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악화되었고,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이다. 2015년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특히 진보 성향 전문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14.8p 대폭 하락했다. 이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가 지난 분기에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예상지수 55.4)을 갖고 있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대감이 큰 실망감으로 반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대부분 30~40p 수준으로 나타나 2/4분기에도 남북관계는 개선세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사드(THAAD) 미사일체제 도입 논란 등 2/4분기에도 남북관계는 현 수준의 긴장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3~2015년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 구 분 | 보수 성향 | | 중도 성향 | | 진보 성향 | | 전문가 평가지수 | HRI 평화지수 | 기대지수 |
|----------|-----------------|-----------------|-----------------|-----------------|-----------------|-----------------|-----------------|-----------------|-----------------|
| | 현재 | 예상 | 현재 | 예상 | 현재 | 예상 | | | |
| '15. 1분기 | 31.8 (▽7.2) | 45.0 (▽8.9) | 27.3 (▽12.2) | 43.2 (▽4.1) | 24.6 (▽14.8) | 33.3 (▽22.1) | 26.7 (▽12.3) | 33.6 (▽11.1) | 40.2 (▽11.6) |
| '14. 4분기 | 39.0 (▲2.4) | 53.9 (▲7.7) | 39.5 (▲5.2) | 47.3 (▲5.2) | 39.4 (▲15.0) | 55.4 (▲20.0) | 39.0 (▲7.7) | 44.7 (▲7.3) | 51.8 (▲11.1) |
| '14. 3분기 | 36.6 (▲4.0) | 46.2 (▲1.1) | 34.3 (▽1.4) | 42.1 (▽4.3) | 24.4 (▽7.1) | 33.4 (▽11.0) | 31.3 (▽1.8) | 37.4 (▽1.0) | 40.7 (▽4.8) |
| '14. 2분기 | 32.6 (▲1.5) | 45.1 (▽0.9) | 35.7 (▲4.6) | 46.4 (▲3.4) | 31.5 (▲5.2) | 44.4 (▲3.2) | 33.1 (▲1.7) | 38.4 (▽2.4) | 45.5 (▲3.2) |
| '14. 1분기 | 31.1 (▽10.8) | 46.0 (▽12.2) | 31.1 (▽14.9) | 43.0 (▽20.1) | 26.3 (▽21.2) | 41.2 (▽21.4) | 31.4 (▽14.2) | 40.9 (▽3.3) | 42.3 (▽19.3) |
| '13. 4분기 | 41.9 (▲6.9) | 58.2 (▲16.7) | 46.0 (▲6.5) | 63.1 (▲15.9) | 47.5 (▲12.4) | 62.6 (▲20.1) | 45.6 (▲8.9) | 44.2 (▲9.2) | 61.6 (▲17.5) |
| '13. 3분기 | 35.0 (▲3.0) | 41.5 (▽8.4) | 39.5 (▲2.4) | 47.2 (▲1.3) | 35.1 (▲7.0) | 42.5 (▽1.8) | 36.7 (▲3.9) | 35.0 (▲4.4) | 44.1 (▽2.6) |
| '13. 2분기 | 32.0 (▲4.9) | 49.9 (▲16.2) | 37.1 (▲11.8) | 45.9 (▲12.4) | 28.1 (▲3.6) | 44.3 (▲9.0) | 32.8 (▲6.7) | 30.6 (▽2.6) | 46.7 (▲12.6) |
| '13. 1분기 | 27.1 (▽7.2) | 33.7 (▽23.9) | 25.3 (▽11.8) | 33.5 (▽23.6) | 24.5 (▽6.1) | 35.3 (▽15.7) | 26.1 (▽7.8) | 33.2 (▽9.1) | 34.1 (▽21.3) |

주 : 금번 평화지수의 보정작업으로 인해 이전 보고서상의 지수와 다소 차이가 존재함.

시사점

첫째,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 양측은 연초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화해협력 방향으로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먼저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를 떠나 광복 70주년 행사 등 양측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15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추진 시에는 다양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당국간 회담 등으로 심화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올해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체육·문화 분야 등의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 사업, 남북 청소년 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이 확대되도록 협력 방안 모색해야 한다. 특히 두만강, 압록강 지역의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협 확대는 향후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하는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統**